

北·中·러 접경지 경제특구 재추진... 남북 전기·가스 연결

정부, 러시아와 TSR 요금 논의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추진

우리 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고 향후 TSR과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서 단절된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철도 외에도 러시아~북한~남한간 전기, 가스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14대 중점추진 과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구축

1.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2.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3.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4.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5.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6.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7.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8.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9.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10.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11.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12.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7.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8.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10.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11.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12.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13. 문화·체육·관광·협력 확대
14.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양성

[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14대 중점과

제를 확정했다.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별도로 러시아의 원전기술을 도입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도 논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 에너지, 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특구 개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험이다.

경제특구는 그동안 추진했다 미뤄져 온 신의주·단동, 나선·훈춘·하산, 나선·하산 프로젝트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을 감안해 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이나 훈춘-하산-나선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해상운송 외에도 TSR, 중국횡단철도(TC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도 추진된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의 경우 해상운송은 43~50일 가량이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할 경우 25~35일로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TS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될 것을 감안해 우리측의 동해북부선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역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km 구간의 동해북부선은 앞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전력망과 가스관 연결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도 공동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인 자금 조달에도 물꼬를 트여 주기로 했다.

북방위 이태호 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상대 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현지 결제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기존에 쓰지 못한 3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50억 달러가 가용한 자원으로 금융부분이 경제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창업, 러시아 원전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는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에는 기존의 과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선거결과 기쁜 한편 두렵다... 성과로 말할때”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들에 유능함 보여줘야”
靑, 직원들 회의장면 생중계



18일 오후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연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에게 유능함, 도덕성, 태도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여당에 많은 힘을 실어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한다면서 실장,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특히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이원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여민1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진행해 청와대 전 직원들이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회의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두려운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부탁 말씀을 줌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에서도,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세를 꼭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높은 도덕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더 높고,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되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덧붙였다.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

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법 등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태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이 다 청와대를 대표하고, 저를 대신하는(국민의)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행정요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저를 대신해 받는 것이다. 친절하게 대응하면 친절할 청와대가, 친절하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면 고압적인 청와대, 권위적인 청와대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30년 넘은 소상공인 ‘백년가게’ 육성

중소벤처부, 혁신기업 발굴·지원
자금조달 돕고 관광공과 협업 홍보



정부가 ‘백년가게’ 육성에 적극 나섰다.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2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내놓았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100% 보증비율과 고정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특별보증을 신설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도 0.2%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글씨가 선명한 인증현판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식신’ 등 유명 O2O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도 협업해 기업 알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더라도 지속성장 가능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수 백년가게 대표의 강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업승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도 실시해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입차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호 기자]

탈핵선언 1년, 원전-신재생 사이 ‘불안한 동거’

신고리 5·6호 건설 진행하지만
‘원자력 에너지 점차 축소’ 결론
2030년 재생에너지 20%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퇴역식에서 탈핵선언을 한 지 19일로 만 1년이 됐다. 탈핵선언 1년 동안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탈핵 행보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중단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건설 중인 원전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당시 약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나온 결론은 ‘건설은 진행

하지만 원전은 점차 축소하자’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3020’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안이 주 내용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가입



작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근 초등학교생들. /뉴스

국 원전 발전량은 2192TWh(테라와트어워)에서 1876TWh로 약 14% 감소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24TWh에서

1243TWh로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계획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사업백지화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천지·대진은 아직 건설도 하지 않았다. 신고리5·6호기 중단에 비해 논란이 적다. 다만 예정 부지의 19%가 진행된 천지 1·2호기는 다시 부지매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토지거래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박찬길 기자 cgr@